

전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4조6000억 투입… 친환경·AI 중심으로 재편 원년 선포…근로자 보호 확대·고용부담 완화도

전남도가 올해를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친환경·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총 4조 6000억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핵심 전략은 친환경·단소중립 대전환, 고부가·AI 기반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이다.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공모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수소환원제철 중심 설비 전환과 철강·금속산업 AI 전환으로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나선다.

상반기 공모하는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본격 대응해 고부가 기반 혁신기술과 인프라를 구축, 미래소재

중심 스페셜티 화학산업을 육성한다.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를 구축해 안정적 전력 수급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적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산업계·지자체가 함께하는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기동했다. 그 결과 여수시와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여수시에 이어 광양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정부와 10대 석유화학 기업 간 나프타분해시설

(NCC) 설비 20~30% 감축 합의에 따라 주요 기업의 사업 구조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석유화학 플랜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25년 1월 예비비 30억원을

전한다. '무탄소 NCC 개발'을 비롯한 연구개발(R&D), '풀리올레핀 기반 고부가 다공성 소재·공정 기술개발', '여수국가산단 AX 실증 산업단지 구축' 등 고부가·스페셜티 연구개발과 AI 첨단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철강산업의 경우 지난해 미국 고율관세 대응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기업에 10억 원을 지원했다.

또 2030년까지 3983억원을 들여 금융지원, 철강 연구개발, 고용 안정, 노후 산업단지 재생, 지역 상권 회복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AX)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AI 기반 대형 철강구조물 제조자 동화 기술개발'과 'SMR용 고온 스테인리스 강 합금·제조 기술개발'을 위해 2027년 정부예산 확보에 나선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축적한 대응 성과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2026년 산업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이 기사회되도록 하겠다"며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재도약하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특별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여야, 12·29 참사 원인 '콘크리트 둔덕' 집중 추궁

국정조사특위 "납득할 설명·책임규명 없다" 질타

피해자 지원 등 담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회 통과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저격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이 다 마련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둔덕의 콘크리트 둔덕이 왜 누가, 어떤 이유로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공항 내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설치) 지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을

임 규명이 없다"고 추궁했다.

유재성 경찰경장 직무대행은 "로컬라이저와 관련에서는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은 로컬라이저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상 '장애물'에 해당하며, 해당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공항 시설법 위반이고,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도 함께 제기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는 기동지역(유도로·활주로) 내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 방지를 항공교통 업무의 목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는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항공 정보회람(AIC), 비행 전·후 정보 등을 통해 비행장 장애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을 장애물로 분류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yna.co.kr

'수질 악화' 황룡강 오염원 정밀 조사 착수

지난해 2등급 하향… 17개 지류·지천 오염원 추적도

전남도는 영산강 유역 대표 관광명소인 황룡강의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해 최근 영산강 수계 황룡A 단위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평가 유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가 2025년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수질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산강 수계 황룡강 수질이 3.06mg/l(2020년 2.48mg/l) 보다 악화돼 그동안 1등급의 약호했던 수질이 2등급으로 하향됐다.

이에 전남도가 2025년 12월부터 정밀 평가 연구용역에 착수해 주요 지류·지천 수질조사를 하고 있다.

조승환, 광주 서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33년 공직 경험 기반 서구 대혁신 이룰 터"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부의장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서구를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33년 공직 경험을 토대로 서구 대혁신의 기틀을 구축하고 함께 만들겠다"며 출

전으로 '민생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당선 즉시 민생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며 "이제는 그간 쌓아온 모든 행

정 역량을 쏟아부어 서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이상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번 정밀조사 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수계인 황룡A 단위유역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수질오염

도가 증가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오염원 추적조사와 배출 경로 조사, 수질항목 간 특성 분석 등을 통한 수질악화의 세부원인 분석,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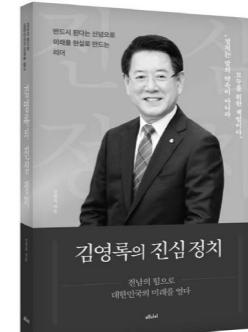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도지사, 18일 '북콘서트'

켄텍서… 45년 정치 여정 '김영록의 진심정치' 공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자공과대학 대강당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영록 아카이브: 국기균형발전과 광주·전남 대통령의 새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북콘서트에서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말 발



김영록의 진심정치

의 과제', 5장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주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6장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실한 정치다', 애필로그,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김 지사는 자서전 성격인 '김영록의 진심정치'와 민선 7·8

기 주요 정책을 다룬 '김영록의 모두를 위한 정책'도 함께 발행했다.

'지역을 아끼고 사람을 돌보는 리더의 진솔한 이야기'를 부제로 하고 있는 이 책은 김 지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한 정책, 굳은 신념과 추진력으로 난제를 해결한 정책,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선 정책, 전남의 자원을 세심하게 살펴 산업화한 정책, 논리와 정당성을 따져 관찰한 정책 등을 담았다.

이 저서에는 우리나라 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인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재명 정부 정책 기틀을 마련한 이한주 대통령 특별정책보좌관, 해양·조선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등이 김 지사의 정책을 평가한 글도 함께 실려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재투표는 전남 국립의대 개교 설립 분수령"

도의회, 국립순천대 '통합 추진 재투표' 적극 참여 촉구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의대 특위')는 15일 순천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통합대학교 추진 재투표'와 관련해 "이번 재투표는 변화한 정부 정책 환경 속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방향을 기를 매우 중대한 절차"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의대 특위는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단계로 넘기며, 정책 결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더 이상 장기 과제가 아닌, 현실적인 정책 국면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투표는 변화된 정책 환경과 명확해진 국가적 방향 속에서 대학 구성원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대내외에 분명히 전달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교육부의 통폐합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 전남의 강력한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정부 정책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며 "대학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낼 때,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현실로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특위는 "이번 재투표가 어떠한 부담이나 압박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선택은 대학 공동체의 책임 있는 고민의 결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순천대학교와 전남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재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